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

건강증진과장	유정애	2133-7560
건강정책팀장	김흥덕	2133-7562
담당자	정연희	2133-7567

사진없음 ■ 사진있음 □ 매수 : 7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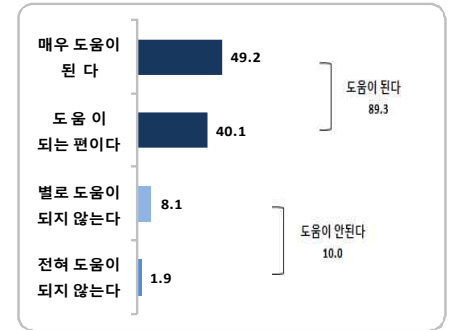
서울시 금연정책 시행 이후 간접흡연 줄었다

- 서울시민 1천명 대상 「2013년 금연도시 서울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」 결과 발표
- 전체 89.3% 긍정적 평가, 흡연자 66.7%도 도움이 된다 평가해 눈길
- 특히 실내 다중이용시설 간접흡연 경험 전년 대비 14.1%p로 큰 폭 감소
- 일평균 간접흡연 노출시간 12.9분('12년)→7.5분('13년) 42% 줄어
- 다수인이 모이는 공공장소 「금연구역 확대정책」에 90.8%가 찬성
- '15년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...홍보·계도에 집중할 계획
- 시, “금연이 하나의 법규가 아닌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로 자리잡는 경향”

-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‘금연도시 서울’ 정책 이후 성인 흡연율은 ‘08년 24.2%→‘13년 21.7%로 꾸준히 감소했으며, 이에 따른 서울시민 하루 평균 간접흡연 시간도 12.9분(‘12년)→7.5분(‘13년)으로 42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또, 「금연도시 서울」 사업이 시민 행복, 건강지수를 높이는데 ‘도움이 된다’는 응답이 89.3%로 긍정적 평가를 한 가운데, 특히 본인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도 ‘도움이 된다(66.7%)’는 의견이 ‘도움되지 않는다(32.0%)’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.

○ 시는 「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」에 따라 ‘11년 3월 1일부터 광장, 공원, 버스 정류소 등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,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’, ‘25개 자치구별 금연클리닉’ 운영, ‘취약계층 금연사업’, ‘청소년 흡연예방사업’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.

<금연도시 서울사업 효과 평가> 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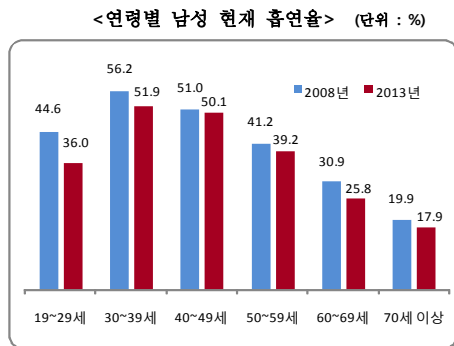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는 「금연도시 서울」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해 이제는 금연이 하나의 법규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로 점차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.
-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을 (54.9%)이 높게 나타나, 실외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또, 여전히 50%를 웃도는 흡연 비율을 보이는 30~40대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금연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.
- 서울시는 만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「2013년 금연도시 서울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」를 실시, 이와 같은 내용의 결과를 21일(월) 발표했다.

○ 여론조사는 지난 1월 17일~18일 서울시내 5개 권역 25개 자치구 만 19세 이상 성인 1,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다. 서울시의 간접흡연 실태와 문제점,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만족도 등을 조사해 향후 금연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했다.

□ 먼저 서울시민의 대표적 건강행태 지표라 할 수 있는 ‘흡연율’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, 30~40대 남성은 다른 연령에 비해 여전히 흡연행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서울시 성인 현재 흡연율> (단위 : %)

구 분	2008년	2010년	2012년	2013년	
전 계	24.2	23.2	22.2	21.7	
성별	남성	45.6	43.5	41.6	40.6
	여성	3.7	3.6	3.7	3.7
연령별	19~29세	24.3	23.8	22.6	20.7
	30~39세	30.8	29.8	29.1	28.3
	40~49세	26.8	26.3	26.8	26.9
	50~59세	21.6	20.7	19.1	20.5
	60~69세	16.5	13.9	13.8	12.5
	70세이상	10.1	10.6	9.5	9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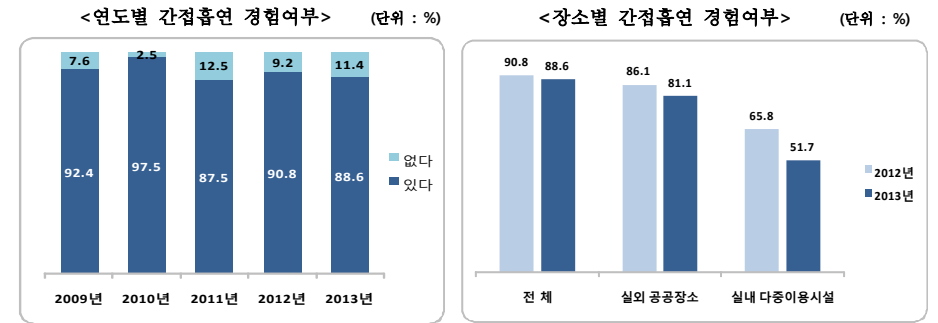


* 현재 흡연율 : 평생 5갑(100개비)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(매일피움+가끔 피움)의 비율
* 출처 :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본부 「지역사회건강조사」

<특히 실내 다중이용시설 간접흡연 경험 전년 대비 14.1%P로 큰 폭 감소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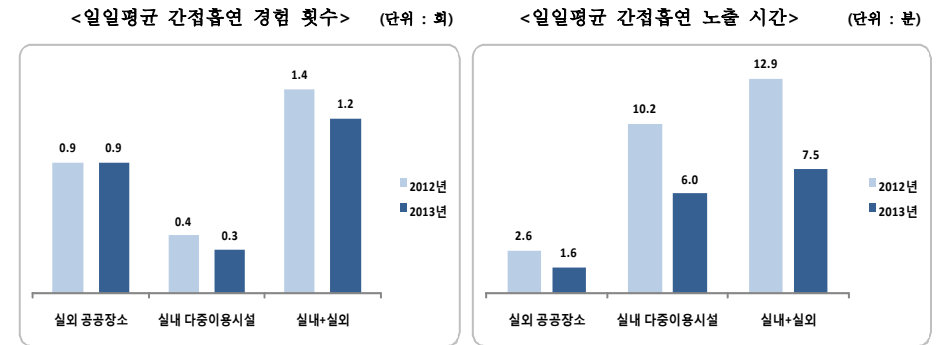
□ ‘13년 간접흡연 경험은 88.6%로 ‘12년(90.8%)보다 낮아진 가운데, 특히 ‘1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정책이 시행된 이후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이 전년 대비 14.1%P나 두드러지게 감소했다.

○ 이는 ‘1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정책에 따라 자치구와의 합동 단속, 시민금연 환경감시단 운영, 단속요원 증원, 집중적인 홍보 등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.



<일평균 간접흡연 노출시간 12.9분(‘12년)→7.5분(‘13년) 42% 줄어>

□ 일평균 간접흡연 노출시간 또한 ‘12년 12.9분→‘13년 7.5분으로 5.4분이나 감소했다.



□ 반면,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경험 횟수는 전년과 동일했다.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로 ‘길거리’가 54.9%로 가장 높았고, ‘버스정류소’ 21.8%, ‘건물입구’ 17.4%, ‘공원’ 3.6%, ‘광장’ 1.7% 순으로 응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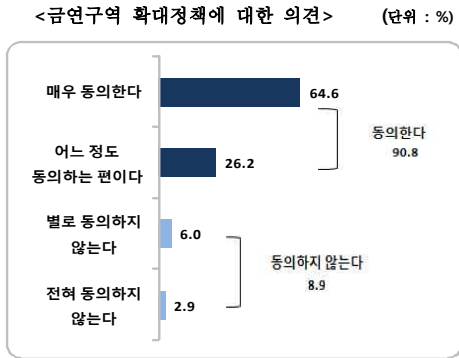
□ ‘12년과 비교해 간접흡연 경험 장소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‘건물입구’에서 간접흡연 경험율이 13.6%→17.5%로 3.9%p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. 이는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흡연자들이 밖으로 나와 흡연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

□ 실내 다중이용시설 중 간접흡연을 가장 심하게 경험한 장소로 ‘호프집, 술집’ 등 주류 취급업소가 56.3%로 특히 높았고, ‘음식점’ 18.3%, ‘건물의 옥외연결 계단 및 입구’ 12.9%, ‘직장 건물 내’ 6.1%, ‘아파트 내’ 2.4% 순으로 응답해 향후 주류 취급업소 및 음식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나타냈다.

<흡연관련 가장 큰 문제는 ‘청소년 및 간접흡연’, 금연구역 확대정책에 다수 찬성>

□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흡연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‘청소년 흡연(37.6%)’, ‘간접흡연(36.8%)’을 꼽았으며,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를 묻는 질문에선 ‘어린이’라는 응답이 37.6%로 가장 높았다. ‘임산부 및 태아(27.1%)’, ‘일반여성(13.4%)’이 그 뒤를 이었다.

□ 다수인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대한 ‘금연구역 확대’ 정책에 대하여는 90.8%가 찬성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에 대하여 대부분의 시민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.



<향후 금연구역 확대, 간접흡연 피해 방지, 흡연자 금연지원에 집중할 터>

□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‘15년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실외에서의 금연구역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○ 이를 위해 ‘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을 홍보하고 제도하기 위하여 시민금연 환경감시단을 운영함은 물론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하여 금연구역 일원화, 다수인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·지정 등 일관성 있는 금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금연문화가 확고히 자리를 잡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이와 함께 청장년층 남성의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을 활성화함을 물론 직장단위의 금연프로그램 운영, 금연자조 모임 등을 지원해 건강한 노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□ 아울러 청소년의 흡연시작 연령을 늦추고 금연을 돕기 위해 담배에 대한 위해성 교육과 함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, 홍보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관련단체와 협력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서울시는 금연구역 위반 단속요원이 부족한 자치구 사정을 감안해 단속인력을 지원하고, 자치구에서는 PC방 협회, 음식점 협회, 경찰서 등과 공동으로 단속인력 400여명을 투입해 지난 3월 17일~3월 31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.

- 합동단속 결과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위반 609건, 흡연실 설치위반 66건, 금연구역내 흡연 1,574명, 실외 금연구역내 흡연 633명을 적발하고 주의·시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.
 - 앞으로도 서울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홍보·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다.
-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“그동안 선제적인 금연정책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시민인식과 공감대를 저변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”며 “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향후 시 금연정책 수립에 활용해 금연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